

‘5·18 왜곡’ 기소·벌금형 잇따라… 역사 부정에 철퇴

광주지검 9명 무더기 기소
인천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전문가 “역사 부정 근절 계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한 이들을 상대로 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본격화하고 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검찰과 법원이 연이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훼손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검은 6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 등의 글을 반복 게시하며 왜곡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으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7월, 블로그에 “5·18이 전국으로 확산해 제2의 6·25 전쟁이 됐다”는 허위글을 올린 6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내 글은 진실”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특별법 적용에 따라 실제 유죄가 선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1980년 5월, 시민들이 계엄군들과 대치하고 있다. 당시 시위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급박했던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5·18기록관 제공·연합뉴스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작·공유한 고교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역시 5·18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5·18 특별법은 원래 1995년 제정돼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시효 중단 등을 규정했지만, 왜곡·편향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었다. 허위 사실이 유포돼 5·18이 ‘폭동’으로 호도되는 등 왜곡이 장기간 이어지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역사 부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기소와 선고가 실질적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온라인에

서 가볍게 올린 글이라 해도 허위 사실이면 명백한 범죄”라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도 “처벌 조항이 생긴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법 집행이 이뤄졌다”며 “이제라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진실을 지키려는 광주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의 성과”라며 “더이상 유족과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허위주장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 처벌만으로 왜곡이 근절되기는 어렵다”며 교육·기록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역사학자 박현주 박사는 “5·18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에게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꾸준한 진실 알리기 운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기소·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허위 콘텐츠 차단, 시민교육, 신고 체계 등 종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아파트 공사로 상가 균열… 현대엔지니어링 배상

법원 “건설 진동·충격 책임 인정”
9000만원 넘는 보수비 지급 판결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근 상가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 임대업체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상가 보수비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법인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상가를 운

영하던 중 2021년 4월부터 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이 나타났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접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진동과 지하수위 변동, 충격하중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해 8월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균열과 하자는 공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유철 기자

‘황제 노역’ 허재호, 탈세 혐의 재판 6년 만 첫 출석

2019년 7월 검찰 기소로 시작
5월 국내 강제송환·구치소 수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탈세 혐의 재판에 6년 만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에서는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사건이 증거 조사와 증인 신청 등 절차를 다시 점검하는 원점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허씨가 뉴질랜드에 머물며 출석하지 않아 6년간 미뤄져 왔다.

지난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허씨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이번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허씨는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사실혼 관계 여성과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약 5억7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자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

박했다. 허씨도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기 공판에서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부과받았으나 미납한 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4년 귀국 후에는 일당 5억원 규모의 노역장 유치 사건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허씨는 이번 탈세 재판 외에도 대주그룹에서 약 1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 여러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10대 시켜 금은방 털게 한 20대… 절도교사 혐의로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10대 청소년에게 금은방 절도를 지시한 혐의(절도교사)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10대인 B군이 광주 북구 우산동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군은 650여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군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

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2일 전남 화순군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B군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송강 신임 광주교감장 “검찰 개혁, 국민 공감대 부인할 수 없어”

취임식서 “검허한 성찰 필요하다”

송강(사진) 신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고검장은 이어 “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오는 겸허하게 성찰하되,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



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제자리에 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면 우리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을 지키는 검찰로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생각한 송 고검장은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로 업무를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

정유철 기자

목포교도소 60대 재소자 사망… 교정 당국, 사망 경위 조사

목포교도소 60대 수용자가 돌연 사망해 교정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6일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40분께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교도소 한 혼거실에서 60대 남성 재소자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동료 재소자들이 혼거실 내 비상벨을 작동해

교도소 측에 알렸다.

교정 당국은 A씨가 갑작스러운 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

